

글로벌 전환시대 신남방정책 관점 대외경제협력 전략: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
토론문

2020. 12. 3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

□ 신남방지역 GVC 확대와 개발협력의 역할

-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신남방지역으로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상 국가에서의 우리 기업의 무역·투자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며, ODA는 해당 국가의 무역·투자 환경(인프라 건설,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)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임.
- 신남방지역 내에서도 베트남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제2의 베트남을 모색할 때에, 특히 발전수준이 낮은 저소득국(예를 들면, 캄, 라, 미)을 그 대상으로 고려한다면, OD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.

□ Private Sector Engagement과 개발금융

- GVC 확대 관점의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의 private sector engagement (PSE) 논의와 연결시킬 수 있음.
- PSE 논의는 기존 private sector development (PSD)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, PSD가 수원국의 민간부문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, PSE는 공여국의 민간부문과 수원국의 민간부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임.
- SDGs 달성이 결국 민간부문의 발전에 크게 좌우한다는 컨센서스 하에 개발협력 내에 공여국의 민간부문을 포함시켜 공여국의 민간과 수원국의 민간을 연결시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.
- 공여국 민간부문의 개도국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개발금융의 역할도 함께 부각되는 것으로 보임.
- 물론 민간부문을 끌어들이는 것이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이 한참 부족하므로 재원의 출처를 추가한다거나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, 한정된 ODA로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임.

□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(2021-2025)

- GVC 확대, PSE, 개발금융은 곧 발표될 제3차 기본계획과 함께 추진가능한 주제들인데, 이는 기본계획이 상생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임.
- 상생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신남방정책, 그리고 개도국 협력의 '진정성'을 강조한다면, 대상국별로 우리나라 협력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함.

□ 3기 중점협력국(2021-2025)과 국가협력전략(CPS)

- 신남방정책의 경우 얼마 전 플러스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번 정부 후반부에 돌입하는 시기이므로 성과를 거둬들일 시점으로 지금 국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.
- 그러나 보다 중기적인 CPS 수립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, 적어도 신남방지역 내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수원국 진단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다운 전략을 수립할 좋은 기회임.
- 현재 CPS는 수원국 발전계획에 대한 평면적인 분석, 수원국과 형식적인 협의, 현지 경쟁자(타 공여국)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전략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음.
- 예를 들면, 안재빈 교수님이 분석하신 신남방지역의 생산직 고용비율과 같은 통계를 역내 국가별로 살펴본다면, 국가별로 협력 유형과 사업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, 이러한 분석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.
- 정부 입장에서는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면 전략 작성이 시급한 일이지만, 실효성 있는 전략, 5년 뒤 성과 파악이 가능한 전략을 마련하려면, (경제적 효과 측면의 분석이 가능한) 학계 전문가와 협업, 현지(개발협력 '시장')에 대한 심층분석은 필수적임.

(끝)